

# 맹탕 '최순실 청문회' 유도하는 청와대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가 2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불출석의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앞장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의 출석을 막아, 의도적으로 '맹탕' 청문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청와대가 버티는 배경에는 결국 성형기술 등의 '비선진료'나 '세월호 7시간' 등 핵심 의혹을 풀 열쇠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서 '비선'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개봉해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배후에 청와대와 검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한수 증인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떼뻑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제가 확인해보니 국회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김 증인의 주소를

## 최순실부터 '태블릿 PC 개봉자' 김한수까지... 핵심 모두 빠져 국정특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진상규명 회피"

요청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증인출석요구서를 해당 증인에게 송달하기 위해 주소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와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3차 청문회에서 비선 최순실의 시종을 든 것으로 유명한 이영선·윤진추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로 '연가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두 행정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직을 사기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의 언론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환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두 사람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보냈는데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접수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분명히 이번 사건의 실제 규명과 수사에 적극 협

조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 또한 두 행정관의 불출석에 대해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같은 데다, 동행명령장 집행도 사전 보도나 생중계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두 행정관의 개인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조직적·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이미 비선 최순실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 간호장교 조모 대위, 최순실의 전남편 정운희씨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은 모조리 불출석했다. 5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우병우씨 등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경호실장 불출석에

따라 특위가 결정한 대통령경호실 현장조사까지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특위는 당초 오는 10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과 비선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차음 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 논란과 비선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을 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고의적 방해로 추정되는 행태와는 달리,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손질 의혹과 성형기술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박 대통령을 '얼호'하는 태도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그나마 출석한 핵심증인들도 죄다 모르쇠로 일관해 밝혀진 게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 특위 위원의 보좌관도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어디있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게다가 청문회 전날 불출석을 통보해버리니, 의원실 차원에서 질의서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스

## "반값아파트 부활로 '헬조선' 탈출" 정동영 "국민연금 투자하면 수익 3%~5%"

정동영 의원은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헬조선'을 탈출하고자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실업, 저출산, 헬조선 모두 주거문제가 관건하고 있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주거안정부를 거듭나야 한다"며 "보기 드물게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과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토부에서는 2~4 분위에 대한 주거정책이 없다시피 한다"며 "2전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점점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영이 대표발의한 '반값아파트특별법'은 토지는 정부(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월 주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 이석수 "미르·K재단 강제모금에 박 대통령 직접 관여 배제 못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5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갔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류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감찰관은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로 오랜 송사가 있었다. 박근혜가 빛이 많은 것도 송사 빛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도 필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재단이 퇴임 후 박 대통령이 운영할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강제 모금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특감실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한규 "최순실 모른다는 김기춘 발언, 100% 위증"

"박 대통령이 정운희-최순실 이혼 중용" ... 이석수 "최순실은 감찰 대상자 아니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비선 최순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데 대해 "100% 위증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실장) 위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정 의원의 "정운희 문건에는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네,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운희 문건의 신뢰도는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영한 비방록'에 세계일보의 정운희 문건 보도 이후 대응과 관련, 사장 교체 등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던 데 대해서는 "그렇게 (비방록대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운희-최순실 부부를 박 대통령이 이혼하도록 권유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한 데 대해 "문건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취재하면서 저도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2014년 1월에 정운희 문건 보도, 2월에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고, 3월에 이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독일에서 도피 중이던 최순

실을 세계일보가 단독인터뷰한 데 대해서는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제가 재직할 땐 정운희문건을 보도하면서 세계일보의 위상이 올라갔는데, 최순실에 대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내시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최순실을 감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순실은 친족도, 수석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감찰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최순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특감은 그러면서 "특별한 성역을 갖지 않고 감찰했다. 법에 감찰대상자와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 말 바꾼 최경희 "정유라 이름도 몰랐다" 정운희 딸인 것 몰랐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례입학 의혹에 대해 "정유라의 이름도 몰랐다"고 했다. "그런 관계(정운희의 딸)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서 최 전 총장에게 "정유라가 특례·부정입학을 할 때는 전혀 몰랐느냐"고 물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입학할 때는 정유라의 이름조차 몰랐느냐"고 물었고, 최 전 총장은 "네,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처 일은 부처 중심으로 하고, 실기라든지 그런 건 해당 단과 대학의 입학시스템에 따라(진행된다)"고 자신은 정유라의 특례입학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특례입학 의혹에) 결과론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 과정에선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궁근 전 입학처장은 "최 전 총장에게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네,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두 분 중 한 분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 전 총장에게 "정유라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고 따졌다.

최 전 총장은 이후 "네, 구두로 (보고 받았다)"라고 시인했다. 그는 "그런데 왜 입학할 때는 정유라의 이름도 몰랐다고 말했느냐"는 이 의원 질타에 "그 이전에 관계(정운희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

## 황교안 개별회동 역제안에 야3당 이견 민주당·정의당 거부... 국민의당 수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야3당 대표의 공동회동 제안에 개별회동을 하자며 역제안을 했다. 이에 야3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공조 균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야3당 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속히 만날 수 있는 각 정당별로 회동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야3당 대표와의 공동회동 대신 각 정당 대표들을 별도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은 또 "국정의 안정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배제한 공동회동에 응할 수 없

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김동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황 대행에게 국정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금명길' 공동회동을 제안했지만 이에 황 대행이 역제안을 한 셈이다.

이에 야3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안을 거부한 반면 국민의당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개별회동 역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과도국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제반 논의는 각 당을 따로 면담하듯 만날 사안"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에서 "탄핵심의를 거스르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 야당을 갈라 치겠다는 알뜰한 발상"이라고 황 대행을 비난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 대행이 제안한 각 당과의 개별 대화는 응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와 관련해서 "황 대행에게 제안했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구성이 미완이지만 만약 친박 지도부가 또 다시 구성된다면 야당은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야정 협의체에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

## "최순실측, 아군-적군 의원 성향 파악도 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국정특위 위원들의 성향 파악까지 상세한 자료가 공개됐다.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이 다녔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으로, 이 인연을 계기로 최순실이 대기업에 강제모금으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 이사가 자리까지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이사가 작성한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K스포츠) 대응방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입수,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들여보이며 "정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나눠준 자료가 맞느냐"고 물었고, 정 전 사장은 "그렇다. 제가 직접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특검과 국정조사 일정과 주요 쟁점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다.

특히 최순실 국정특위 소속 17명의 여야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류한 뒤, 정치 성향 파악까지 해놓았다.

문건에 따르면 8명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중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 등 3명은 청색으로 별도 표시한 뒤, '친박'이라고 적시했다. 또 최교일 의원의 경우 '검사 출신'이라는 별도 설명을 달았다.

야당 특위 위원들 중에는 박영선, 안민석 두 의원을 '적색'으로 별도 표시한 뒤, '공격수'라고 기재했다. 한미리도 국정특위 의원들의 성향 파악을 한 뒤, 아군-적군을 구분한 것이다.

박 의원은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냈다"며 "이걸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라고 조직적인 배후 가능성을 의심했다.

박영선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 재단차원에서 직원들도 대응해야 하니까 보고 좀 참고를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